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8년 5월

동아시아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 방향 모색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심포지엄 5월 22일 개최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심포지엄을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동아시아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이란 주제로 「제2회 동아시아 농업논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 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어업금융공고,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日, 식품산업 연계해 농촌 활성화 추진

「동아시아 농업논단」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농업부문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기업, 학계·연구기관, 행정기관의 관계자들이 경험과 지식, 정보 등을 교류하여 농산물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산·학·관 토론의 장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올해는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한·중·일 공동 관심사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심

포지엄을 열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여 농업발전과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의 새로운 발전체계 구축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中, 농업의 산업화로 소득증대 도모

기조발제에서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타카기 유키(高木勇樹) 총재가 ‘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동향 및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타카기 총재는 식품산업을 매개로한 농상공 연계 또는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례를 발표했다. “향후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공급, 생산·가공·판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산업화, 식품 리사이클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청

귀(李成貴) 주임은 ‘중국의 농업과 식품산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리 주임은 “중국 정부는 3농(농업, 농촌, 농민)이 가장 중요한 당 사업임을 천명하였고, 기본적으로 공업이 농업을 보조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농민에게 ‘적게 받고, 많이 부여하며, 풀어주는’ 정책을 펴서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발전을 실행토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중국은 농가와 선도농기업(龍頭企業)이 연계한 ‘농업의 산업화와 ‘전업농민의 조직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동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농업정책, 식품정책, 소비자 정책의 조화와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식품 및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위한 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하고 위험정보 교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후에 충북대학교 성진근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은 주식회사 그린리프 사와우라 쇼지(澤浦彰治) 사장, 주식회사 MCC식품 미즈가키 히로다카(水垣宏隆) 사장, 중국은 북경시 방산구홍소두협회(房山區紅小豆協會) 류창안(劉長安) 회장, 우리나라는 전남대학교 서종석 교수, 우리 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원, 농협중앙회 홍성필 상무, 한국식품공업협회 홍연탁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와 통계 교육 실시



연구원은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일환으로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와 통계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4월과 5월에 걸쳐 4차례 실시하였다.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교육의 일환으로 2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4월 8일에 과학적 성과측정 평가 및 자료포괄분석(DEA) 강의를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13명을 대상으로 ‘이해조정/갈등해소를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3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24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의 일환으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교육을 실시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교육을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강의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역량과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계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계간 ‘중국농업동향’ 발간



연구원은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농업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간으로 ‘중국농업동향’ 첫 호를 5월 1일자로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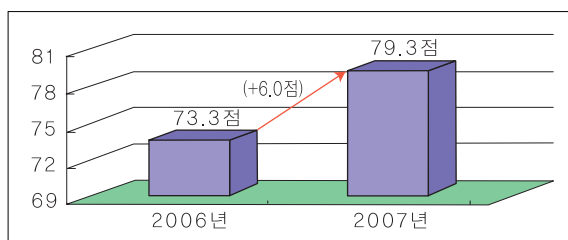
중국농업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4월 북경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고

수집·분석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 농업정보에 ‘중국농업정보’란을 개설해 최신 중국농업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기존의 중국농업 관련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매 분기마다 ‘중국농업동향’을 발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창간호의 ‘농업정책 브리핑’란에는 중국의 2008년 농정방향과 시사점, 곡물 수출 제한 조치의 파급영향 및 분석, 1,2차 농업센서스 주요 결과 비교,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을 싣고, ‘농업·농촌경제 동향’란에는 2007년 농업·농촌경제 동향, 가격동향, 무역동향, 소득동향, 2007년 향진기업 현황을 실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농업이슈를 다루고 정책자료로 농산물 품질관리안 전법과 농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방법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중국의 농업통계를 실어 활용토록 제작하였다.

“연구원 고객만족지수 상승 뚜렷”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연구원 고객만족지수 변화 추이〉

우리 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만족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총 26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연구원의 고객만족 종합지수는 79.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점이 상승하여 기관 전체의 상승폭(4.5점)을 앞질렀다. 분야별로는 연구과제수행 분야에서 평점 80.0점, 정보제공서비스 분야에서 평점 77.8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5대 경영목표로 고객만족경영과 성과확산을 중점 추진하면서 고객DB를 정비해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고객만족경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성과확산추진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객현장을 제정하고 고객관리 실행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고객만족경영을 전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번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나타난 분야별 미비점을 분석하여 하반기 고객만족경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객의 소리(VOC)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고객 요구에 적극 반응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최 지 현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림부의 명칭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고 식품이 주요 농정대상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식품이라 함은 수입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총칭한다. 따라서 농정 목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업부문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품정책 대상의 확대

종전의 농림부정책이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은 식품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안전 등 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고객 또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식품영양정책은 소비자의 식품섭취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핵심 농정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산업정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외식산업분야에서 농업과의 연계를 높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데 중점 목표를 두고 있다. 신정부는 국내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돌파구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식품정책은 식품안전, 식품영양, 식품산업이라는 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념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주요 당면문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정책은 농식품의 종류와 취급 단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고, 관련법률도 부처별로 산재되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더불어 예방차원에서의 과

학적인 식품안전정책수행을 위한 위험평가 등의 기능도 취약하다.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위험평가기능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체계적인 식품정책 추진 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영양정책은 체계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전담 행정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만 국민영양 부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식품산업정책의 최근 논쟁 이슈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국내산 농산물 이용수준은 낮은 식량자급률과 농산물가격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채소류와 육류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10% 이내에 불과하다. 외식분야도 신선농산물을 제외하면 50% 이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품산업의 진흥은 오히려 농산물의 수입을 증대시켜 국내 농업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각의 식품정책이 연차기록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념을 정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안전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과학적인 위험평가 기반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안전전담관리기구의 설치와 독립성 확보도 주요 추진 과제이다.

영양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행정조

직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지원제도(Food Stamp) 시행으로 영양의 질적인 개선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식품정책 정체성 확립하고 단계적 추진

식품산업정책은 산업진흥과 농업보호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걸음씩 물러서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의 식품산업 연계는 산지에서 세척, 절단 등 전처리를 포함한 1차 가공비를 제고와 수직적 통합(Integration)을 통한 푸드체인에서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농식품의 판로개척 등도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식품제조업은 원료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품질경쟁력을 지닌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상품개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식품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품정책의 추진조직과 관련 법률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부처와 생산자,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검증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은 개별산업의 이익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 **R**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의 쟁점과 방향

송 미 령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뉴타운은 합리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 방지책으로 1980년대부터 여러 위성도시들이 건설되었던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기성시가지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강남북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서울 강북지역에 이루어진 뉴타운 조성사업은 계기로 관심이 증폭되었다.

올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착수

금번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농어촌 뉴타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젊은 정예 인력 양성과 유입을 위해 농어촌 정주 방해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현재는 농식품부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 영농 승계 가구를 중심으로 한 100~300호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이며, 올해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지방의 인구 유지 노력에 부응한 새로운 지원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농촌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자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재정적 한계로 그러한 노력이 큰 돌파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호응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농어촌의 새로운 중심지 개발과 공간구조 재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

로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농어촌 중심지로서 소도읍, 면소재지 등이 국토 전체에서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위치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이촌향도형 인구 이동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중심지는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다. 뉴타운은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중심지 개발의 의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의 발전적 계승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패키지화 추진을 위한 매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은 포괄적 도시민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반면, 젊은 귀농 수요는 간과한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번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계기로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관련있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둘러싼 쟁점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젊은 귀농가가 가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100~300호 입주 수요의 집단적·동시적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혹은 약 3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는 집단화된 택지를 조달하고 기존 정책 사업들을 엮어 목표하는 인프라를 모두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다. 모두 이우 있는 우려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본래의 사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어떠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우선, 농어촌 뉴타운의 입주 대상을 영농 기반을 갖춘 승계 농업인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과 뉴타운 입주를 원하는 기존 농어촌 주민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영농 기반을 갖춘 승계 농업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뉴타운의 규모와 형태를 100~300호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유형화하여야 한다. 어떤 지역은 300호를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20~30호의 전원주택단지를 소규모 분산 입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정 규모와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신중한 접근 필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반 사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핵심 사업을 마련한 후에 관련 사업의 패키지화를 도모하여야 안정적인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뉴타운 조성 전 단계를 관리할 사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뉴타운 조성의 사전 구상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사업 발주는 담당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주택 분양, 입주 등 관련 업무는 사실상 주택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농어촌 뉴타운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 도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농통합형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 농어촌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뉴타운 조성을 기대한다. 

최근의 DDA 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송 주 호 연구위원

세계무역기구(WTO)는 제네바 시각으로 5월 19일 오후 7시에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세부원칙(모델리티)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2001년 11월 출범한 DDA 협상은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는데 금년 들어 협상종결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차 수정안, 민감품목 규정 중점 보완

금년 2월 8일에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모델리티 1차 수정안이 배포되었고, 지난 3개월여 동안 실재 없는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 다시 부분적으로 쟁점들이 합의되었다. 그동안의 협상 진전사항들이 이번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것이다.

이번 모델리티 2차 수정안의 특징은 지난 2월의 모델리티 1차 수정안보다 불확실성을 현저히 줄여 1차 수정안에서 [] 안에 표시한 숫자를 171개에서 34개로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많은 경우 그간 제시한 감축률 범위의 중간치를 확정된 숫자로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1차 수정안에서 관세 감축률을 [48~52]%로 제시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중간치인 50%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감품목의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민감품목은 관세를 적게 감축해도 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쿼터로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쿼터물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비량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개도국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에 대해서

는 아직 몇 %나 인정할 지, 관세감축은 얼마나 예외로 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해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SP를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개도국들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G33 국가들, 특히 인도와 터키 등은 민감품목과 달리 SP는 선정기준(Indicator)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반대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편이다.

한편,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개도국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미 국가들은 열대작물에 대해 관세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ACP(African, Caribbean, Pacific) 국가들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그동안 누려오던 특혜관세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번 모델리티 수정안에도 이에 대한 진전이 없다. 국내보조 분야도 아직 감축률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기술적인 사항들만 보완되었다.

품목별 실익분석 중요

지난 3개월간의 협상에서 진전된 사항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세번별로 민감품목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주요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자 희망하는 품목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델리티 확정 전에 세번별 소비량 관련자료도 제출하여 검증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민감품목 혹은 특별품목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관세감축률을 낮추어도 되지만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쿼터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감품목의 지정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기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줄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감품목 선정의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모든 품목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품목 간 우선순위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물밑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차선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

5월 26일 주간, 향후 협상 중요 분수령

이번에 제시된 2차 수정안을 토대로 제네바에서는 5월 26일 주간부터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중순경 농업과 비농업을 함께 논의하는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를 개최하여 부문간 균형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고 3차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경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한 후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를 WTO 사무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부 개도국들은 농업, 비농업(NAMA) 이외의 규범(Rules) 분야에 대한 협정문도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 협상, 지리적 표시 등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추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부문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 측은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우선 농업과 비농업협상에 치중한다는 전략 아래 부문간 협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에서도 모델리티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개도국들의 불만이 많아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 내 협상 타결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R**

미국 2008년 농업법 제정, 농업보호 강화

김 태 곤 연구위원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이 난항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입법기한을 대폭 초과하여 마련한 의회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재가결함으로써 지난 5월 22일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인쇄 실수로 일부 법률 규정이 누락된 채 행정부에 제출되는 등 보기 드문 헤프닝도 있었다. 새로운 농업법은 2002년 농업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2,900억 달러의 지출을 인정하는 등 보호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끈다.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간 대립 치열

현행 농업법은 2007년 9월말이 기한이었다. 새로운 농업법 제정을 위해 미국 농무부는 2005년 7월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6년에 41개 과제와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말 농업보호를 대폭 감소하는 정부안을 제안하였다. 금년말 총선을 앞둔 하원은 지난해 7월 보호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가결하였고, 상원은 농업재해 등에 지원수준을 확대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가결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미 2002년 농업법의 기한을 넘어서었다. 요인은 행정부와 의회간, 또 의회 내의 상하원간의 대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가까스로 양원 협의회의 조정안이 결정되었고, 5월 14일, 15일에 각각 하원,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보호수준 문제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하원은 21일, 상원은 22일, 각각 압도적인 표차로 재가결함으로써 2008년 농업법은 확정되었다.

새로운 농업법의 명칭은 '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다. 실시기간은 5년(2008~12년)이며, 소요예산은 의회 예산국이 산정한 예산 집행 전망액(2,800억달러)을 약 100억 달러 상회하는 2,900억 달러에 달한다. 5년간의 내역을 보면 푸드스텝·학교급식·국내 식량원조 등에 약 2,000억 달러, 작물프로그램에 430억 달러, 환경보전에 270억 달러, 작물보험에 230억 달러 등이다.

당초 행정부는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보조금 감축을 희망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가격지지용자,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고정직불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소맥은 목표가격과 용자단가, 대두는 목표가격을 인상하였다. 또 연소득 250만 달러 이하였던 보조금 수급자격에 대해 행정부는 50만 달러 이하를 제안하였으나 75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2009년부터 '수입보전 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CCP를 대체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ACRE는 '가격'기준 보전방식인 현행 CCP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수입(판매금액)기준 보전방식이다. 기준수입(최근 2년간 전국 평균가격×최근 5년간 주별 평균단수)과 당해연도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강화하였다. 농무부는 CCP 수급자의 90% 이상이 ACRE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가격이나 수량 변화 여하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보전유보계획(CRP)의 계약면적 상한을 현행 3,920만 에이커에서 3,200만 에이커로 인하하였고, 환경개선장려계획(EQIP) 예산액을 34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사업당 보조상한을 인하하였다.

재해대책으로서 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3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 재해대책을 확충하였다. 이번 농업법은 학교급식과 영양개선 등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ACRE에 의한 경영안정대책 강화, 그리고 환경보전·재해대책 확충 등이 특징이다.

행정부는 새로운 농업법에서 지지수준을 인하하여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국내 농업보호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곡물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준을 증액한 점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였던 것이다.

이번 농업법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이미 200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조기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개선이 지체되자 브라질은 준수 촉구를 위해 다시 제소, 지난해 12월 WTO 패널에서 미국 패소가 결정됨에 따라 미국은 브라질의 보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국제사회 논란 예상

한편 브라질과 캐나다가 제소한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WTO는 패널을 설치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양국은 미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은 191억 달러이나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수십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또 고정직불과 CCP에 대해 미국이 허용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미국은 2005년도 AMS는 129억 달러로 WTO에 통보하였다. 브라질과 캐나다가 주장하는 CCP(47억 달러)와 고정직불(52억 달러)을 감축대상으로 본다면 AMS는 228억 달러로서 이것은 미국의 허용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R**

5월 농정 주요 동향

미얀마·중국, 자연 재해 발생

5월 12일 오후 2시 48분 쓰촨성 문천현에서 강도 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의 여파가 사천을 비롯하여 감숙, 섬서, 중경, 운남, 호북, 하남, 호남 등까지 미쳤고, 25일 현재 사망자 62,000여 명, 실종자 23,000여 명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쓰촨성은 흑룡강성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여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 생산액은 전체 31개 성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식량작물 중 쌀과 대두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인 돼지고기의 최대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농작물 33,000ha, 비닐하우스 5만 동, 가축 1,300만 마리(돼지 81만두), 축사 등 부대시설 730만㎡, 농업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쓰촨성 농업 생산량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릴 린치사 등에서는 지역적으로 수급 불균형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2월 폭설 사태에 비해 전체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2일에는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가 미얀마 서남부 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은 5개 주가 미얀마 전체 쌀의 65%, 전체 가금류의 40%, 돼지의 40%를 생산하는 등 농업·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UN 세계식량농업기구가 14일 개최한 회의에서 종자·비료 등의 지원과 관개시설 등의 복구에 243백만 달러, 가축 사체 처리, 백신 접종, 사료 공급, 축사 복구 등에 20백만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이클론 피해로 미얀마의 4~6월 수확 및 6월 파종이 줄어들 경우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쌀 생산량의 감소와 구호물자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쌀을 비롯한 국제 곡물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19개 시·군에서 발생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신고된 후 3일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5월 25일까지 전국 19개 시·군에서 총 33건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중 68건이 신고되었고, 42건에 대하여 양성 판정을 내렸으며, 5월 12일 후에는 신고되지 않고 있다. 예방 차원의 살처분이 이루어진 농가까지 포함할 경우 950농가를 대상으로 814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현재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상인 소유의 닭·오리의 예방적 살처분 실시, 재래시장 및 판매차량 등 소독·출하제한 조치, 전국 육용 오리농장 일제 검사, AI 관련 닭·오리고기의 안전성 TV 홍보, 라디오 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5월 24일까지 324백만 수의 가금류를 수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금류 사육 농가 및 가금류 전문 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협하나로 클럽 4개 매장(양재, 창동, 고양, 성남) 기준 닭고기 매출액은 AI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4월 1일 1,483만원이었던 것이 5월 1일 486만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5일 1,043만원까지 회복되었다.

FAO, 식품 가격은 높게 유지될 듯

최근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전망(Food Outlook) 2008년 5월호는 식품 부족을 겪고 있는 빈국들의 식품 수입액이 2008년 16.9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2007년보다 40% 증가된 수치이며, 2000년 수준의 4배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농산물 국제 가격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과거의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FAO 식품 가격 지수는 2008년 2월 이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1/4분기 평균 가격은 여전히 전년 동기에 비해 53% 높다. 이러한 높은 식품 가격은 특히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식품부문에 지출하는 나라들의 소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AO의 하테즈 가넴(Hafez Ghanem)은 “식품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값싼 상품이 아니다. 높아지고 있는 식품 가격은 식품의 절대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854백만 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새로이 배고픔에 직면할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도 세계 곡물 생산은 약 2,192백만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쌀은 2007년에 비해 3.8% 증가하며, 최근 수급에 여유가 없던 밀은 2008년도 작황이 개선되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 증가에도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아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8/2009년도 세계 농산물 생산 전망이 긍정적인 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식 농산물의 가격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재고량을 늘리기 위한 필요량과 수요 자체의 증가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부족했던 재고를 늘리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한 해 이상의 풍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식품정책 수립, 산업·영양·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 필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5월 1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5월 14일(수)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서 김정호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21세기 새로운 동력원인 식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이상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장은 ‘새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체안을 발표하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는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품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기술 개발 체계 구축, 식품산업의 세계화, 식품클러스터 육성, 총공급망관리(SCM)체계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이상선 교수는 ‘식품영양 정책의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영양 정책이 등한시 되어왔던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식품 공급부터 영양소 섭취까지 단계별 관련 요인 분석, 식품·영양·건강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대상 집단별 적절한 영양교육 강화, 식품영양 감시를 위한 부처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이력추적제도 등의 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 기능 강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화 등을 식품정책 발전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서종석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광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욱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태희 경희대학교 교수, 문현경 단국대학교 교수, 박연우 풀무원 부사장,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병달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회장, 조용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다.

종합 토론에서 업체 측은 새로 식품산업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큰 기대를 표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주문하였으며, 소비자측은 식품안전에 더 큰 힘을 쏟아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곡물파동’ 농경토론회 개최

연구원은 5월 27일 중회의실에서 ‘곡물파동,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란 주제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농경토론회에서 최세균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곡물파동의 원인과 향후 추이

를 정리하여 발표한 뒤,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 연구진 대외활동

△ 이동필 선임연구원은 5월 14일 원예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제 와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5월 16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북한 식량을 둘러싼 주변 상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우리밀 자급률 제고와 산업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병률 연구원은 5월 22일 해남 옥천 미국종합처리장(RPC)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RPC연구회 특별세미나에서 ‘세계 식량안보의 위기와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허덕 연구원은 5월 8일 영남대 자연자원대학 강당에서 열린 영남대 주최 학술심포지엄에서 ‘국제 사료가격 급등에 대한 축산업의 영향과 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정덕 연구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농촌가난극복 우수사례 교류 국제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4일 이집트로 출국했다.

△ 김창길 연구원은 5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권오복 연구원은 5월 20일 강릉대학교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2008년 국내외 경제와 농업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송미령 연구원은 5월 9일 화천군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08 한국농촌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김수석 부연구원은 5월 24일 부산대에서 토지법학회가 주최한 학술행사에 참석해 농지제도 관련 발표를 했다.

△ 정호근 전문연구원은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 시장작업반(APM) 회의에 참석하였다.